

‘한일지성의 열린 대화’ 주최자 공동 발표

“한일, 미래세대를 위해 협력해야”

(日韓、未来世代のため協力すべき)

서울대 일본연구소와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한일지성의 열린 대화 2014 서울”이 양국 28명의 지식인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4일 워커히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한일 양국 간의 감정적인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성적인 대화를 복원하고, 양국 관계에만 사로잡혀 국제적 감각이 둔해질 수도 있는 현 상황을 우려하는 지식인들의 모임이었다.

양국 참석자들은 현재의 한일관계가 정치적 대화의 단절이 경제나 국민의식의 악화에도 영향을 주는 “복합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50년간 역사적 화해 시도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에 대해 감정의 잣대로 비판하는 사회세력도 존재하고 양국 언론 보도도 균형감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한일 갈등이 국제무대에까지 번져, 양국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조차 못하고 동반자 의식이 약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갈등이 더욱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재 한일 협력의 장애가 되고 있는 현안을 양 정부가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일 지성의 대화(이하 지성의 대화) 참가자들은 복합위기의 장기화를 극복하고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양국은 두 가지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였다. 첫째, 과거에 지나치게 사로잡히기보다는 미래 세대에게 밝은 한일관계를 열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양국간 관계에 닫혀 있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늘려가야 한다.

이와 같은 한일 협력의 확대를 위해 양국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대화를 증진시키며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상호 불신과 오해의 회피가 협력의 출발점이다.

일본측은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본의 군국주의로의 회귀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전후 일본은 평화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고 최근의 변화도 한국이 염려하는 군국주의화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측은 일본측이 우려하고 있는 한국의 대중 경사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은 중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지 않으며 일본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고 있다.

현재의 상호 불신과 오해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상호 오해를 풀기 위한 대화를 늘려가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지성의 대화에서는 한일이 새로 열어갈 수 있는 다면적, 다층적 협력 아젠다들이 제안되었다.

우선,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소자화, 고령화 등 사회적 과제에

대한 공동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 양국 사회의 균질화가 협력의 바탕이라는 것이다.

또한, 제3국에서의 경제 협력, 개발도상국을 향한 ODA 협력 등 국제사회에서의 공동 행동의 여지가 많다.

아울러,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보건 위생, 방재 및 재난 대책 등 초국경 이슈에 대한 공동의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성의 대화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한일관계의 재구축이 중심 테마로 제기되었다. 현재의 불안한 한일관계를 미래세대에게 넘겨줘서는 안되며,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는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들이 제시되었다.

(1) 한일관계의 좋은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여 사례집이나 책을 발간하여 학습 현장에서 부교재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가르쳐야 한다.

(2) 한국은 전후 일본에 대한 이해를,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의 미래세대에게 전후 한일관계사, 특히 교류 협력에 대한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3) 양국은 청소년 교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제도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대학생은 물론 초중고 학생들에게 일찍부터 상호 존중과 상호 이해의 밑거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 상대국에 대한 수학여행의 권장이나 홈스테이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4) 양국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메가 이벤트나 대규모 문화 행사의 개최는 교류의 확대를 진작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도 2018년 평창 올림픽 및 2020년 동경올림픽을 향한 협력체제의 구축이 바람직하다.

(5) 장기적으로는 한일 양국의 공동 연구와 인재의 공동 양성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캠퍼스 아시아의 확대, KOICA-JAICA의 협력, 국제적 연구개발 협력, 공동연구거점의 구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